



오늘의 주요기사

2023 5 10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	,			1
江原日報	21	[]				1
강원도민일보	26					2
강원도민일보	26					2
강원도민일보	09	"	...		"	3
江原日報	14					4
강원도민일보	19					4
江原日報	03	“ 伊			”	5
江原日報	21	[]	(.) .	()		5
강원도민일보	27					6
江原日報	01					7
강원도민일보	04					7
강원도민일보	03	,		" 가	"	8
江原日報	01		~	道		9
江原日報	03	"	...		"	10
江原日報	03	‘	,		.	가11
江原日報	14	"			"	12
江原日報	07		63	‘	,	12
강원도민일보	10					13
江原日報	13					14
江原日報	12				.	14
강원도민일보	21	[]	~			15
강원도민일보	21	[]	'		'	16
江原日報	19	[]	~	,		17
江原日報	19	[]	道	가,		18

江原日報

2023 05 09 ()

[동정] 권혁열 강원도의회장, 심오섭·강정호 도의원

권혁열(강릉) 강원도의회장은 10일 오전 10시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개원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심오섭(강릉)·강정호(속초) 강원도의회원은 10일 오전 10시 양양 강원도 해난어업인 위령탑 앞에서 열리는 제29회 해난어업인 위령제에 참석.

江原日報

2023 05 10 ()
21

◇권혁열강원도의회장은 10일
오전 10시30분
한국과학기술연
구원(KIST) 강
릉분원 천연물연
구소 개원 20주
년 기념식에 참석.



오전 10시30분
한국과학기술연
구원(KIST) 강
릉분원 천연물연
구소 개원 20주

년 기념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05 10 ()

26

박정하 의원 오늘 원주기업도시 봉사

박정하(원주갑·사진) 국민 의힘 국회의원이 10일 원주 기업도시 샘마루공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봉사활동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를 '봉사 주간'으로 지정, 권역 및 당원협의회별로 봉사활동을 전개 중이다.



박 의원 역시 원주시민들의 지지를 잊지 않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의미에서 이번 봉사를 기획했다. 이날 박 의원은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이재용 시의장, 도·시의원, 당원들과 함께 '플로깅'을 통해 공원 일대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권혜민

강원도민일보

2023 05 10 ()

26



서울종로미술협회 도의회 방문 서울 종로미술협회(회장 이애란) 회원 33명은 9일 양속희 도의원 격려차 강원도의회를 방문,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에게 1000만원 상당의 미술품을 전달했다.

강원도민일보

“특자도 비판 필요할 땐 해야... 깊이 더한 기사 반영 기대”

강원도민일보 2023년 독자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지난 2일 강원도민일보 사회의실에서 열렸다. 본지 독자위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실질적인 확보를 위해 도민 역량이 결집되도록 이슈를 끌고 나가야 한다’며 ‘독자층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일반 객석에도 귀를 기울여 다양하게 반영, 기사의 영역을 넓혀간다면 더욱 큰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독자위원들은 여성, 이주민, 농업인 등에 대한 심층기획 기사, 다양한 분야에서의 칼럼의 적극적인 활용 등도 당부했다.

김현욱 강원대 명예교수·작가(독자위원장) 특별자치도라는 개념이 막연했는데 그간 보다 열정을 갖고 살펴보기 못한 점에 대한 자책도 든다. 제주에 이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음악인으로서 호주가 떠올랐다. 시드니하면 오페라하우스가 바로 생각나듯 호반의 도시 춘천에도 이같은 풍경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만들어 질 가능성이 열릴지 상상하게 된다. 예술도시 춘천으로 이끌고 가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제정이 늦어지니 그 꿈이 가까워 보이지는 않는다. 강원도민일보는 이런 상황에서 관련 캠페인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중요한 시기인만큼 지역대표 언론을 가장 가까이 살피는 독자위원들도 힘이 되어 운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강원도민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김현욱)가 지난 2일 강원도민일보 사회의실에서 열렸다.



김현욱 강원대 명예교수·작가(독자위원장) 함영이 작가 강원대 명예교수·작가(독자위원장) 박운순 강원대 명예교수·작가(독자위원장) 이기대 강원대 명예교수·작가(독자위원장) 김형숙 강원대 명예교수·작가(독자위원장) 김정호 강원대 명예교수·작가(독자위원장) 김진영 강원대 명예교수·작가(독자위원장) 김택우 강원대 명예교수·작가(독자위원장)

함영이 작가 친절한 신문이 되려면 객석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포럼이 열리면 출사 등 중요 인사의 인사말이 실리는 반면 정자 당사자 목소리는 빠지는 경우가 많다. 뉴스 인사이드나 백브리핑도 나오면 좋겠다. 정치인들의 사적관계 등 흥미로운 뒷배경을 취재하면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 논란이 있는 문제의 경우 칼럼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면 좋겠다. 포털 검색으로 ‘무엇 (WHAT)’을 알기만 하면 이제 GPT가 ‘어떻게 (HOW)’에 대해서도 얘기해주는 시대다. 신문이 전하는 사건·사실이 있다면 칼럼은 이를 해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데스크 등 칼럼 필진을 보며 높은 역량도 느꼈다. 독자 크고 객석 중심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또 이번 정부 들어 가라앉은 여성 이슈를 더 살려서 특화해야 한다. 속초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육아정책을 독자 개발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거 정말 긍정적 기사구나 싶어서 회담도 가질 수 있다. 어려움 보다 기회를 생각하는 젊은 부모 세대에 맞춰서 긍정적 시각을 제시해달라. 예민한 사건 기사의 일러스트 등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한다. 각 정당 도당의 논쟁을 많이 반영해 달라는 주문이 반영된 점은 눈에 띄었다.

박운순 강원대 명예교수·작가(독자위원장) 이주민 이야기가 많지 않다는 지난번 지적은 많이 반영된 것 같지 않다. 많은 이주노동자가 강원도에 들어오고 있다. 올해 오는 계절 노동자만 6500명이라고 한다. 국내에 오는 계절 노동자 전체 중 강원도가 상위권을 차지한다. 계절 노동자가 어디서 온다는 소식은 나와도 향후 어떤 문제가 예견되는지는 언급되지 않는다. 인제의 경우 지난해 90%가 일하러 갔을 때였다가 높다. 여성의 경우 출산 후의 회복을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지역 주민에게도, 현장을 떠난 노동자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다. 인구소멸지역인 강원도에 사는 외국인이 잘 정착해서, 유망한 인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브로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단기간으로 들어오면서 떠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절박한 환경에 놓여서 이따할 때 배경을 짚어줘야 한다. 최근 춘천 약사 천 시화전 일부 작품 철거 기사와 박지현 선원원의 칼럼 등은 의미있게 읽었다. 독자도 관련해 강원대 제주에 비해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을 듣는다. 관련 진단도 공급하다.

독자·객석 중심 보도·뒷배경 취재 주문
칼럼 필진 역량 호평 긍정적 시각도 기대

온라인 기사 후속·연관보도 뒷받침해야
내용 다변화·심층화, 흥미 구성 변화 필요

강특별 분야별 영향 설명·문제제기 제안
농업인·여성·이주민 노동이슈 다뤄주길

이기대 강원대 명예교수·작가(독자위원장) 온라인 편집 구성이 좋아 신문을 옮겨놓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강릉산발사발생지역을 정확히 알고 싶었지만 지도로 구현한 그래픽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외국신문의 경우 사료가 나면 속보와 관련 기사를 계속 묶어준다. 후속·연관보도를 엮어가면 더 충실한 보도가 가능하다. 웹사이트의 경우 기사 검색이 어렵지 않지만 풍부한 느낌은 없다. 알고리즘을 통해 관심 있을 만한 다른 기사를 제시하는 유도 기능이 약하다. 오프라인 기사를 모은 참고 같은 느낌이 크다. 홈페이지에 남을 동기 부여가 적어 리텐션(retention·빠져나가지 않고 남는 것)이 어렵다. 벤치마킹 대상이나 전문 기업들은 만능 온라인 기능을 강화하면 확장성이 생길 것이다. 독자층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본질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 지금 지역에서는 사람뿐 아니라 앞으로 유입될 사람들이 강원도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독자층을 굳히면 안 된다. 더 깊이 있는 분야별 기사를 통해, 수도권 거주자, 젊은 층을 타깃으로 다변화 해야 한다. 방탄소년단 멤버가 원주에 입대했으면 지역 언론부터 부대 이야기를 취재해 번역 보도하는 노력, 그 정도의 완결판이 조금씩이라도 필요하다.

김형숙 강원대 명예교수·작가(독자위원장) 강원도에는 농업 이슈가 매우 많다. 제도 변화와 문제 자체는 다뤄주시지만 시행 후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매우 어려

운 환경에 놓인 농업인들이 한 번씩 모여 아픔을 토로하고 목소리를 내며 요구하기도 하는데 정치권과 달리 잘 나오지 않는다. 농민 입장을 전하는 데 보다 앞장서달라. 특별자치도는 일반인뿐 아니라 관련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저 역시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의논했다고 하는데 법안에 농업 분야는 들어가 있지 않다. 법안을 연재식으로 설명해주고 있지만 큰 타이틀로만 나가다 보니 이해가 어렵다. 일반 도민도 쉽게 알 수 있게 분야별로 세밀하게 다뤄서 동참을 끌어내 주시면 좋겠다. 봄철에 많이 채취하는 나뭇잎의 식용 여부 구별이 어려운데 강원도의 산야초목 칼럼이 많은 도움이 되어 좋다.

김정호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힘을 실어 주어야 할 때일수록 더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 특자도 관련한 언론보도가 최근 좀 느슨해진 경향이 보인다. 중앙정부를 대부분 비판하지만 강원도 차원의 대비책 점검은 소극적이다. 이럴 때 더 비판해야 한다. 6월 11일 출범 자체는 공청회와 국회 법사위, 본회의 등 절차만 통과하면 이뤄지는 것이다. 당장 6월 출범에 역량을 쏟을 것이 아니라 과연 특자도 전부가 개정안 137개 중 무엇이 얼마나 반영되고, 또 안 될 것인지에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법안과 자치 결정권이 몇 개가 올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특별기사를 더 내달라. 간판과 주민등록증 바꾸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절차도 실질적 권한은 못 받아야 한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문제 제기를 계속해달라. 좋은 말만 하는 게 힘을 실는 게 아니다. 특자도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지나 살피고, 특별하게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면서 키워나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숙제다.

김진영 춘천 청년 공동체 춘천리 대표 고향은 아니지만 강원도 춘천에 살게 되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역 이웃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강원도민일보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 청년 입장에서 정말 좋게 된다. 그래서 강원도민일보도 지역 에도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강원도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이야기 혹은 여러 계층의 강원도민 당

사자들의 목소리가 더 균형 있고 다양하게 담기기를 바란다. 강원도민일보를 통해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면 좋은 지역 매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택우 강원도의회 사회정책위원회 위원장 지면 보다 홈페이지로 기사를 보는 경우가 많다. 홈페이지 구성 포맷은 직관적이고 기사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다. 상단 소셜네트워크 배너를 통해 다양한 접근을 돕는 점도 구독자에 대한 배려로 느껴졌다. 주요 뉴스를 상단에 배치, 강원 각 지역 주요 뉴스 접근성이 좋다. 다만 기사 제목 배치 등에 통일성이 없는 점은 아쉽다. 중요도에 따라 기사 순서가 정해지기는 하지만 긴급 기사가 아니라면 지역별로 묶는 방안은 어떻게 한다. 해당 지역의 전체 소식 확인이 편할 것 같다. 강원도민일보를 통해 강원도의 정책이나 발전 방향, 문제점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어 좋다. 더 큰 발전을 위해 지역이나 연계를 초월해 구독이나 검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보았으면 한다.

송정록 편집국장 포털 입점 후 신문 제작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많은 기사를 한정된 지면에 넣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더 어려워졌다. 빠야 할 지점을 많이 해주셨다. 디지털 환경에 맞춰 뉴스를 객관화시키지 않고 당사자 중심으로 바꾸고자 한다. 최대한 많은 분들을 지면에 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누구나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연 군사 관련 심포지엄에서 한 고성군민의 발언을 놓칠 수 없어 별도 박스로 싣기도 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도 적극 실려야 한다. 이주민, 농업 등과 관련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살피는데 소홀했다면 더 살피겠다. 여러 환경의 영향으로 웹 지면 다양성에 아직 한계가 있는데 확대해 가는 것도 노력하겠다. 특자도와 관련해 4대 규제가 있는데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현실에 있다. 자치단체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협상 카드가 부족해 답보 상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법안과 추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더라도 더 반영하겠다. 강원도가 한국 자치권의 미래를 주도한다는 비전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정리/강주영

江原日報

2023 05 10 ()
14



한마음 경로잔치 동해시 삼화동새마을협의회·부녀회 주최, 삼화동상생협의체 주관 한마음 경로잔치가 9일 삼화동 다목적회관에서 심규언 시장, 김기하·최재석·유순옥 도의원, 이창수·안성준·민귀희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05 10 ()
19



양양군·의회 합동토론회 양양군·의회 합동토론회가 9일 춘천 남이섬에서 개최됐다. 김진하 군수, 최태섭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오세만 의장 등 군의원, 진중호 도의원, 이양수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색케이블카와 낙산-양양읍 상권을 연결하기 위한 전략등을 집중 논의했다.

江原日報

2023 05 10 ()
03

“伊 남티롤의 분권·연구 개발 중심 플랫폼 전환 벤치마킹”

강원연구원 ‘알프스산맥 접경국가들의 분권’ 주제 세미나

이탈리아 남티롤 등 알프스산맥 접경국가를 모델로 강원도의 특화 산업을 키우고 기업을 유인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연구원이 9일 연구원 리버티 홀에서 ‘알프스산맥 접경국가들의 분권’을 주제로 개최한 분권세미나에서 박상용 연구원 과학문화거점 센터장은 이같이 밝히고 “이탈리아 남티롤은 분권과 함께 미래를 위한

연구 개발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용호 객원연구위원은 “현재의 법 구조는 자치 분권에 취약하다”며 “강원도 특성에 부합하는 포괄적·구체적 권한 부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탈리아, 스위스 등 선진국의 분권 사례를 기반으로

강원도의 고유한 역사와 주민 특성을 반영한 강원 분권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현진권 강원연구원을 좌장으로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기철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안성호 대전대 명예교수, 오정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특별위원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江原日報

2023 05 10 ()
21



◇심오섭(강릉·사진 왼쪽)·강정호(속초)강원도의회는 10일 오전 10시 강원도 해난어업인 위령탑 앞에서 열리는 제29회 해난어업인 위령제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05 10 ()
27

강원 소아중환자 의료공백 해소 맞손

강원대 어린이병원 개원 10주년
도·5개 시군·병원 업무협약 체결
전문의 충원 안정적 서비스 기대

강원대병원이 어린이병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지역 소아중환자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병원장 나성훈)은 9일 강원대병원에서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어린이 공공의료강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현영 강원대총장, 육동한 춘천시장, 신영재 홍천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이재준 한림대춘천성심병원장,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송세언 강원대병원 상임감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13년 개원한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현재까지 68만 5989명의 환자를 돌보는 등 지역사회 공공의료 강화의 한 축을 담당했다. 강원대병원은 어린이병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소아중환자 의료공백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강원대병원은 이날 춘천시·홍천



강원대병원(병원장 남우동)은 소아중환자의 지역완결형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강원도 및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과 ‘소아중환자의 지역완결형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대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아중환자 전담 전문의를 충원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 공공의료 강화 심포지엄이 이어졌다. 나성훈 강원대 어린이병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소아청소년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 및 병원 의료진 확보가 시급하고 시설, 장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정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보건사무관이 ‘소아청소년 의료정책의 방향’, 문진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어린이병원의 발전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현재 소아과 전문의를 수급하기 어렵고 도내에 소아과가 없는 지역도 많지만 강원특별자치도를 맞아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걱정 없는 곳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병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시장이자로서 강원대 어린이병원이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총장은 “지난 10년을 발판 삼아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선도적인 강원대 어린이병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호

江原日報

2023 05 10 ()
01

도교육청 바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내달 12일 공식 출범식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강원도교육청은 6월12일 오후 1시 본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을 갖는다. 다음 달 11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따라 강원도교육청도 공식 출범식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향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슬로건은 '교육을, 새로이'로 정했다. 이미 도교육청 외벽에 슬로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 홍보대사 캐릭터 개발과 카카오톡 등 SNS 이모티콘 제작에 착수했으며 여기에 스토리를 더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만의 교육 경쟁력을 강조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직속 기관의 명칭도 바뀐다. 최근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다음 달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맞춰 교육청 직속 15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 강원도교육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으로, 강원도교육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등 기관명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붙였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특별자치도법 개정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강원도와 별개로 김병규 부교육감, 박옥녀 정책국장 등이 국회를 찾아 교육분야 특례 반영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세민 대변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발맞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5 10 ()
04

원주교육청 옛 학성초 부지 이전 확정

도교육청, 시 부지매입 별도 추진

강원도교육청이 옛 학성초 부지로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을 확정했다.

9일 강원도교육청은 원주시가 현 교육지원청 부지와 옛 학성초 부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원주교육지원청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 교육지원청 부지에는 단설유치원이 조성된다. 지난달 원주시가 부지매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원주시의 부지 매입 여부와 별도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원주교육지원청 신청사는 옛 학성초 부지(학성동 152-1)에 부지면적 2만 1797㎡, 건축면적 7129㎡, 총 사업비 390억원 규모로 설립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5월 중투를 신청하고, 7월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현 교육지원청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 매각하려던 기존 계획에서 벗어나 단설유치원 설립이 추진된다.

단설유치원 규모는 14학급, 정원 242명이다. 원생은 현 원주교육지원청 반경 2km 내 공립병설유치원 10곳(2023년 4월 1일 기준 208명 등록)을 합쳐 확보한다.

도교육청이 별도로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힘에 따라 도교육청과 원주시간 논의됐던 부지매입은 사실상 마무리된 모양새다.

앞으로의 관건은 이미 한 차례 반려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 통과 여부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사업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각보다 자체활용계획이 중투 통과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민영

강원도민일보

2023 05 10 ()
03

도, 공청회 대비 막바지 점검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대응”

김 부지사, 진술인·관련팀 회의 개최
행안위 소위 위원 협조 재요청 예정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겠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공청회를 하루 앞둔 9일,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공청회 대응 전략 등 막바지 점검에 매진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총괄하고 있는 김 부지사는 10일 개최되는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하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범수 강

원연구원분권연구실장과 강원도특별자치국 등 관련팀과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김 부지사는 공청회 개최에 앞서 도정치권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만나 협조를 재요청하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번 강특법 전부개정안의 5월 입법작업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때문에 강원도는 1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5월 입법까지 사활을 걸고 있다.

김 부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왜 출범해야 하는지 등의 당위성을 지역의 논리를 넘어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논

리로 공청회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핵심규제 개선 특례가 관철돼야만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차원의 큰 문제인 지역소멸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겠다”고 했다.

박지은 pje@kado.net

2023 05 10 ()

01

江原日報

경제성 극복 영월~삼척 고속도 예타 대상 선정

기재부 SOC사업 5건 조사 착수
비용대비편익 낙제점 불구하고
균형발전 측면 당위성으로 통과
예타 통과시 2034년 개통 가능

속보=강원남부권 속원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경제성 우려를 극복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본보 9일자 1면 보도)에 선정되는 대반전을 이뤄냈다. 비용대비편익(B/C)이 0.117로 측정돼 낙제점을 받았지만 균형발전 측면의 당위성 설파와 정치력으로 통과했다. ▶관련기사 3·14면

기획재정부는 9일 재정사업평가 위원회를 열고 영월~삼척 고속도로를 비롯해 전국 SOC 사업 5건에 대한 예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중점 신설사업으로 반영된 노선이다. 하지만 B/C가 0.117에 불과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았다. 통상 B/C가 0.5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고 1.0을 넘으면 경제성까지 충족한 것으로 본다.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경제성은 커트라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강원도와 정치권이 영동 남부와 폐광지 속원사업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까지 뵈



받침되면서 예타 대상 사업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 경기 평택부터 삼척까지 국토를 횡단하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6축 구간 중 현재 영월~삼척 구간만 유일하게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평택~제천(127km) 구간은 이미 개통·운영 중이며, 제천~영월(29km)은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타 선정 사유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강원남부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서(동해항~평택항) 간 화물 연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2면에 계속

2023 05 10 ()

03

江原日報

“남부권 최대 현안청신호... 착공에 역량 결집”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대상 선정’ 정치권 일제히 환영
 지역구 이철규·유상범 의원 “예타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김진태 지사·박상수 시장 “수도권 접근성 획기적 개선”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이 9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자 강원도와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14면

정부부처를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 온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강원 남부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실제로 착공을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

디뎠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사람과 물자가 편하게 이동하고 과거 전성기 시절의 강원 남부지역으로 되살릴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경제성 분석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SOC 구축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

문에 경제성에만 함몰될 경우 지방 SOC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며 “특히 강원 남부권은 기존의 도로망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규 SOC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40여년 전 삼척군(현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과 정선·영월 지역은 전국으로 무연탄과 시멘트, 어족자원을 공급하며 국가의 생존을 담보했지만 이제 국가가 이 지역 주민의 생존을 걱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폐광지역이자 인구소멸지역이 되었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을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지역 주

민·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한마음으로 노력해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최종 발표가 있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이제부터는 조기 착공을 위해 낮은 경제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간선교통망이 극도로 취약한 강원 남부 및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사업”이라며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삼척~영월 간 동서고속도로의 예타 조사 대상 선정을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 강원 남부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서 간 화물 연결 향상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하늘·황만진기자

일명 ‘하이드로젠 하이웨이’ 명명 〈수소 고속도로〉 폐광지 생존·미래 산업 가치 설득

道 예타 통과 이끌 묘책은

속보=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본보 9일자 1면 보도)에 선정됐지만 예타 통과와 사업 확정을 위해서는 종합평가지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숙제도 주어졌다.

강원도는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업의 당위성, 산업적 측면에서의 미래 투자가치를 적극 어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 고속도로망 연결은 지역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정부에 설득해야 한다. 경기 평택~삼척을 연결하는 동서6축 고속도로는 1997년 건설이 시작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영월~삼척 구간만 진척이 없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비용대비편익(B/C)은 0.117에 불과한데 이는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산간지역인 강원도의 태생적 한계 탓이다. 실제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건설단가는 산간지역을 고려, 교량과 터널의 비중이 높아 km당 702억원에 달한다. 통상

고속도로 건설단가는 km당 400억원가량이다. 단순한 B/C 분석만으로는 영원히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없는 구간으로 예타 단계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폐광지 인구가 1975년 53만5,000여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17만5,000여명으로 70% 감소한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 건설은 강원 남부권의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 산업적 가치도 높다는 것이 강원도의 판단이다. 경기 평택에는 대규모 수소 융·복합 특화단지, 삼척과 동해에는 수소 산업 클러스터와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안전성시험센터, 실증테스트베드 등이 구축된다. 평택과 삼척이 국내 수소산업의 양축이라는 점에서 이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가치는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강원도는 이를 ‘하이드로젠 하이웨이(수소 고속도로)’라고 명명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방침이다. 최기영기자

2023 05 10 ()
14

江原日報

“주민 숙원 해결 첫 발 예타 통과 열망”

영월~삼척 동서고속도로 예타 대상 선정

강원남부 주민들 지역 교통망 개선 일제히 환영
개설 시 폐광지 회생 동해항 활성화 기폭제 기대

【삼척】삼척~영월 간 동서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삼척·동해·태백시와 주민들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보이며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교통망이 취약한 강원 남부 및 경북 북부지역을 수도권과 연결,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예타 조사에서 주민들의 열의와 필요성이 전달돼 예타가 꼭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 구간의 B/C(비용대비편익)가 낮게 평가됐지만, 지역 낙후도, 주민 숙원, 향후 파급효과 등 종합평가에서 예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만큼 교통망 개선 효과를 집중 알린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은 예타를 통과해 도로가 개설되면 폐광지역을 비롯, 삼척·동해·경북 울진 등 동해안 남부권의 교통망 개

선과 교통수요 분산, 접근성 향상, 평택항과 동해항 최단거리 연결을 통한 동해항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협 (사)강원경제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평택~삼척 간 서해안과 동해안의 물류 이동이 중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루트의 교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로 예타에 접근해야 한다”며 “강원 남부지역의 발전과 미래 북방교역 중심의 새로운 역할이 기대되고 충청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관광산업의 접근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함악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태백은 삼수령 쪽에 IC 개설이 필요하고, 강원 남부 지역 SOC 확충을 위해 구간별 착공과 사업비 대폭 투입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순 삼척시의장은 “이 구간은 과거 무연탄과 시멘트, 어족자원을 공급하며 국가의 생존을 책임졌지만, 이제는 폐광 지역이자 인구소멸지역으로 주민의 생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과거 강원 남부지역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타 통과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민진기자**

2023 05 10 ()
07

江原日報

강원혁신도시 입주기업체 63개 ‘전국 꼴찌’

수도권 이전기업 17곳 불과... 입주 기업 고용도 전국 최저
산업연구원 “인프라 개선 나서야”... 시 “정주여건 개선 만전”

강원혁신도시 내 기업체 수가 전국 혁신도시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혁신도시 성과와 향후 과제’ 자료에 따르면 강원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체는 63개로 전국 혁신도시 10곳 중 꼴찌다. 전국적으로 혁신도시에 이전한 기업은 2,047개사로, 전국 혁신도시 중 강원혁신도시가 차지하는 기업체 비중은 3.1%에 불과하다.

전국 혁신도시 중 이전 기업체 수가 100개 미만인 곳은 강원을 포함해 충북과 경북 등 3곳뿐이다.

더욱이 강원혁신도시로 이전한 기

업 중 도내 이전기업은 41곳으로 65%를 차지한 반면 지자체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수도권 이전 기업은 17곳에 그쳐 보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주기업 고용 역시 전국 최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강원혁신도시 이전 기업의 고용 규모는 557명으로, 전국 혁신도시(1만9,215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2.9%에 그친다. 30명 이상 300명 미만 중견기업 수는 3곳이며, 나머지 기업은 모두 30명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와 원주시에 따르면 강원혁신도시 클러스터는 100%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혁신도시 기업 이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클러스터 조성이 활기를 띠면 기업체 이전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게 도와 원주시의 설명이다.

산업연구원 측은 “강원혁신도시의 경우 기업 유치와 수도권 이전 기업 비중 모든 영역에서 저조한 만큼 성과 진단과 향상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우선 정주여건 등 인프라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기는 원주시 지역개발과장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관광 거점 병원과 대중교통 개선, 복합체육센터 개관 등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5 10 ()
10

춘천 신북읍 주민 세월교 존치 청원 제출

2000명 참여 시·도의회에 촉구
“지역 자원 보존, 관광 활용을”
시 간담회 열고 의견수렴 계획

속보=세월교 존치 여부가 지역사회의 쟁점(본지 3월 7일자 10면 등)이 된 가운데 신북읍 지역 주민들이 세월교 존치를 위한 주민 청원을 춘천시와 강원도의회에 제출했다. 원주환경청은 세월교 철거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춘천시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9일 본지 취재 결과 신북읍변영회, 신북읍이장협의회, 신북읍주민자치회 등 자생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최근 “세월교는 수십여년간 다리를 건너던 주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사계절 놀이터는 물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춘천시와 강원도의회에 세월교 존치를 촉구하는 주민 청원을 각각 제출했다. 청원에 참여한 주민은 2000여

명에 달한다. 주민들이 세월교 존치를 위해 나선 이유는 세월교 철거를 위한 관련 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춘천시와 원주국토관리청은 당초 2015년 소양7교착공 때만 하더라도 세월교를 철거하기로 했다. 소양강댐 방류 등으로 수위가 높아지면 시민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로 철거를 잠정 보류했으나 지난 2021년 세월교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 춘천시는 인도진입을 봉쇄하고 철거로 가닥을 잡았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이 이관된 원주환경청 역시 최근 춘천시에 공문을 보내 세월교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춘천시는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양강댐 준공 전 해인 1972년 만들어진 세월교는 홍수 때 댐 수문이 열리면 잠기는 잠수교 형태다. 물이 월류하기 때문에 세월교(洗越橋), 또는 다리 아래가 원

형의관으로 돼 있어 ‘콧구멍다리’라는 별명이 더 유명하다. 김용기 신북읍변영회장은 “올해가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인데 소양강댐 건설을 위해 만든 세월교가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며 “오래된 지역의 자원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청원을 받은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오는 17일 해당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양속회 강원도의

원도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월교 존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존치 여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원주환경청 등에 주민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은 ssnee@kado.net

江原日報

2023 05 10 ()

13

속초 도내 첫 어린이 승하차 구역 운영

영랑초 주변 등하교시간 두 차례 최대 정차 시간 5분

【속초】학교 앞 주정차 금지로 차량을 이용해 자녀들을 등하교시키던 학부모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속초에서 강원도 내 처음으로 학교 주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승하차 구역이 운영된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정부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발

맞춰 안전한 학교 통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속초시, 속초경찰서와 함께 영랑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승하차 구역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승하차 구역 운영시간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8~9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1~4시 하루 2차례이며, 최대 정차 시간은 5분

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지정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녀들을 등하교시키는 데 따른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등하교길 학생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다.

교육청은 영랑초교와 함께 청대초교도 승하차 구역 지정을 검토했지만 도로가 좁아 교

통 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로 보류했다.

영랑초교 승하차 구역은 이달 중 게이트 설치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영랑초교와 유사한 환경의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kwon@kwnews.co.kr

江原日報

2023 05 10 ()

12

강릉시 공공기관 유치·지원 총력

이전기관 지원 조례 추진
시 “제도적 기반 마련”

【강릉】올 상반기 중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이 제시될 예정인 가운데 강릉시가 정부 및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시는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수립,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유치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명시한 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등의 연구기관, 학교나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의 목적이 인정되는 기관이다.

조례안에는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해 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유치 및 지원 계획, 유치 관련 중요

사항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릉으로 이전·신설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공공기관 등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한 기관의 직원 중 강릉시로 전입한 사람에게는 이주 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올 6월에 개최하는 강릉시의회 제309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율 시 특별자치과장은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역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달순기자 dsgo@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5 10 ()
/ 21

영월~삼척구간 조기 개통 관건

-90년대 착공 동서고속도, 강원권만 지지부진 수혜없어

경기도 평택에서 강원도 삼척을 잇는 최단거리 동서고속도로 마지막 건설 지인 영월~삼척구간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5월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영월~삼척 91km 구간이 예타 대상사업에 오른 것입니다. 22년 1월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계획(2021~2025년) 중점사업 확정에 이어 예타사업에 포함됨으로써 후속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실상 예정된 수순이나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매우 뒤늦은 감이 더 크기 때문에 예타 통과를 마냥 환영하며 반기긴 어렵습니다.

이번에 예타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다면 2024년으로 또 다시 연기될 것이었기에 우선 환영하지만, 실상은 기쁨보다는 착잡함이 앞섭니다. 동서를 잇는 6축 고속도로의 하나인 평택~삼척 구간 250km 중 평택~제천 구간은 이미 2015년 개통됐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삼척에 이르는 강원권 위주 구간은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90년대 평택 착공과 동시에 삼척에서도 동시 착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강원권은 지금껏 배제됐고 그 수혜도 누락됐습니다.

1990년대 처음 건설에 착수한 경기도 평택과 달리 영월~삼척은 겨우 첫술을 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20년 8월 예타조사를 통과한 제천~영월 구간(29km)은 10년 뒤인 32년이라야 완공 예정이고, 이보다 더 늦게 출발한 영월에서 삼척 구간 완공까지는 다시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수십년 '교통 불모지' 신세를 겪어야 하는 현지 주민의 이동권에 대한 불편 부담과 교통망 구축의 차별 행정은 조속히 해소돼야 합니다. 90년대부터 동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고속도로 개통을 요구해 온 현지 주민들이 신속한 개통을 촉구하며 영월과 삼척 양 지역 동시 착공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는 예타 통과가 아닌 조속한 개통이 관건임을 주지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된 것을 선처로 자족할 것이 아니라 조기 완전 개통으로 취지를 구현해야 합니다. 강원남부권의 열악한 교통망 개선 계기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섣불리 방식으로는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제천~영월 구간 완공 계획연도인 2032년에 맞춰 삼척까지 나머지 구간에 대한 완공을 가져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제대로 차별을 시정하는 조치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5 10 ()
/ 21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 우려

-출범 1개월 앞두고 원안 하향 조정 가능성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규정을 놓고 강원도와 정부부처 간 막바지 실무협의를 한창입니다. 도민들의 관심은 당초 발의한 개정안의 원안이 얼마나 유지될지 여부입니다. 각 부처는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하향 조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범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원안을 대폭 양보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자칫 이름뿐인 특별자치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지를 갖고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도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137개 조항의 강원특별법 전면개정안에 담긴 4대 특례 규정의 원안 사수를 목표로 3개월째 정부측과 협의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부처는 도의 자치 권한을 약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도가 4대 특례로 제시한 환경, 산림, 국방, 농업 분야 중 접경지역 개정안 협상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수 조항이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조정되는 등 부처의 입장이 반영된 재개정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다른 특례 분야에서도 정부부처는

이런 기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접경지역 내민군복합단지 조성 특례’ 규정은 작전적, 입지적, 재정적 측면에서 종합 고려돼야 한다는 국방부의 의견에 따라 전면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기지 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도 ‘도지사가 국방부장관에 건의할 수 있다’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할 부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접경지역 군부대 농·축·수산물 조달 시 개정안은 구매를 의무화하고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국방부 의견을 반영, 구매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자치 권한의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법안이 국회로 넘어간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선택한 것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됐기 때문입니다.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막고 발전의 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 권한 강화와 규제 완화가 전제돼야 합니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은 어불성설입니다. 강원도는 권한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협의를 벌여야 합니다. 도 정치권도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야 합니다. 강원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총력전을 기대합니다.

江原日報

2023 05 10 ()
/ 19

영월~삼척 고속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강원 남부권의 최대 역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양양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의 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 또 폐광지와 동해, 삼척, 경북 울진 등 동해안 남부권 접근성 향상, 동서 물류 중심인 평택항과 동해항 최단거리 연결을 통한 동해항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됐지만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B/C(비용대비편익)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통 인프라는 지역에 서 개발사업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이며 지역의 발전 척도를

가능하는 핵심 요소다. 고속도로 개통 효과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자치단체의 정책적인 변수들에 따라 다양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개통 이후 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관광업계의 상품 개발,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 등에 의해 그 파급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간 SOC시설은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담보로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그 기반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건설된다. 국가가 국민 생활의 어려운 정도 등을 감안해 SOC시설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국가기간 교통망체계는 비록 국가가 계획하고 설계하지만 지방정부가 끈질기게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건의해야 이뤄지는 구조다. 폐광지역인 강원

남부권의 주민 생활은 어떠한가. 석탄산업은 한때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돼 왔고, 세계 속에 빛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하지만 석탄산업 구조조정과 사양화로 폐광이 잇따랐고, 지역경제 역시 심각하게 위축된 채로 수십년의 시간이 흘렀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한 강렬한 주민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강원랜드를 설립하고 국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너무도 열악한 접근

망 등으로 대체산업은 활착되지 못하고 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국가사업으로 조기에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역대 정부의 강원도에 대한 SOC시설 확충은

참으로 아박했다. 동서 간 유일 축이었던 왕복 2차로의 영동고속도로를 4차선화할 때도 그랬고, 연장 40km에 2차로였던 동해고속도로 삼척 연장 때도 마찬가지였다. 강원도의 총체적인 발전에 지정체를 가져온 것은 바로 열악한 교통 여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강원도 SOC시설 확충을 경제 논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즉, 국가 발전적 틀에서 그리고 통일 한국의 국토계획적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단기적 수급에만 얽매어 진정 중요한 가치를 놓쳐 버린다면 그 피해는 후손 세대에 고스란히 안길 수밖에 없는 부채의 전가나 다름없다. 강원도 SOC는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강원 남부권의 최대 역점 사회간접자본

서울~양양·영동고속도 교통 수요 분산 효과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는 시각서 접근할 때

江原日報

2023 05 10 ()
/ 19

道 관광객 증가, 경제 위기 돌파구 삼아야 한다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강원관광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강원도관광재단의 '강원도 관광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총 3,594만명으로 1년 전 3,186만명에 비해 408만명(13%)이 더 찾았다. 올 1, 2월에는 전년 동 기간 대비 각각 68만명(6%), 149만명(15%)이 늘어난 1,262만명, 1,118만명이 방문했다. 3월에는 전년 대비 191만명(19%)이 불어난 1,215만명이 강원도를 찾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관광 수요가 폭발하면서 겨울축제 재개와 겨울 레포츠 관광 방문, 봄나들이객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5월에도 양구 곰취축제, 원주 한지문화제, 춘천 마임축제 등 다양한 지역 축제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어서 외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은 4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000여명의 3.6배로 큰 폭의 증가세다. 해외 단체 관광객들의 북적이는 모습에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20만명으로 2021년 96만여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아졌다. 외국인 관광이 완전히 회복했다고는 할 수 없어도 오

랜 기간 침체에서 벗어나 새롭게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관광산업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 세계 GDP 기여도가 10.4%에 이른다. 제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최소 2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다. 청년층 취업 비중이 다른 분야보다 두 배나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굴뚝 없는 하이테크산업으로 미래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촉망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광은 팬데믹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분야다. 따라서 강원관광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관광산업은 지방소멸, 청년일자리, 탄소중립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미래산업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빠른 시일 내 견어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여름휴가 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휴가 기간 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에 그쳤다. 부족한 쇼핑 콘텐츠, 비싼 물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관광은 종합산업이다.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엔데믹 시대의 강원관광 활성화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는 물론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